

# 2014년 관세청 업무보고

2014. 2. 20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순 서

I. 기관 현황	1
II. 2013년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	4
III. 2014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9
IV.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2
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 / 13	
2.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 15	
3.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 17	
4. 불법 · 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 19	
5.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 21	
6.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 23	
7.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 25	
V. 분기별 추진계획	27



# I. 기관현황

1

개정 : 1970. 8월,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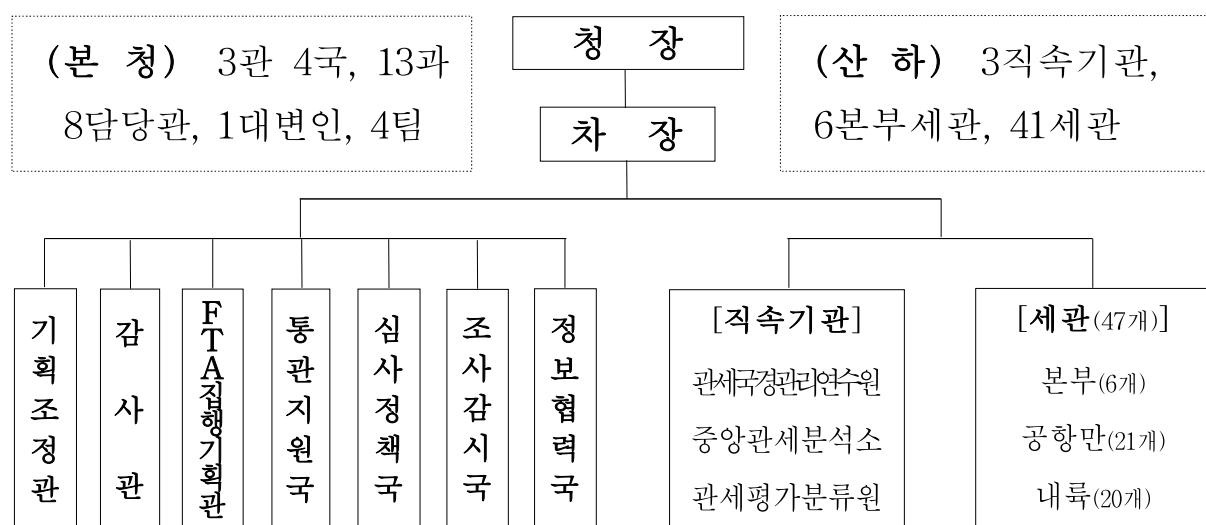
## 주요 기능

- ① 국가 재정수입 확보      ② 수출입 · 여행자 통관  
③ 불법 · 부정 무역 및 외환거래 차단      ④ FTA 이행 및 활용 제고

- (통관지원국) 수출입 물류촉진 및 통관적법성 확인, 여행자 통관
  - (심사정책국) 국가재정수입 확보, 관세포탈 심사, 성실납세환경 구축
  - (조사감시국) 밀수·불공정무역·불법 외환거래·총기·마약 등 단속
  - (정보협력국) 관세행정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관세외교 추진
  - (FTA집행기획관) 국내외 FTA 이행 점검, 기업 FTA 활용 지원

3

## 조직



본부세관(6)	서울 · 인천공항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공항만 세관(21)	평택 · 속초 · 청주 · 김포 · 인천공항국제우편 · 김해 · 거제 · 마산 · 포항 · 울산 · 광양 · 목포 · 여수 · 군산 · 제주 · 동해 · 대산 · 고성 · 사천 · 부산국제우편 · 통영
내륙지 세관(20)	안양 · 대전 · 천안 · 용당 · 양산 · 창원 · 수원 · 안산 · 구미 · 구로 · 성남 · 의정부 · 충주 · 파주 · 원주 · 사상 · 진주 · 부평 · 익산 · 전주

**4****정 원**

('14.1월 말 기준)

구 분	계	본 청	본부세관	세관	직속기관
계	4,570	331	2,729	1,373	137
5급 이상	362	115	132	96	19
6급 이하	4,208	216	2,597	1,277	118

\* (성비) 남성 68.1%, 여성 31.9%

**5****2014년 세출예산** : 4,826억 원\*

인 건 비	기본경비	사업비
2,625억 원 (54.4%)	276억 원 (5.7%)	1,924억 (39.9%)

\* '13 세출예산 4,546억 원 대비 6.1% 증가한 수준

**6****2014년 징세목표** : 68.1조원\* (總 국세 216.5조원 중 31.5%)

관 세	수입부가세	기타 내국세**
10.6조원 (15.5%)	51.3조원 (75.4%)	6.2조원 (9.1%)

\* '13 실적(65.5조원) 대비 4.0% 증가한 수준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II. 2013년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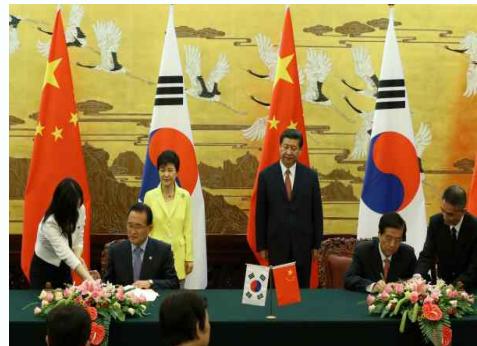
## ① 무역하기 좋은 관세행정 환경 조성

- 한·중 정상 임석하에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협약(AEO MRA)을 체결\* ('13.6월)하여 비관세장벽 완화 등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AEO MRA 7개국 체결 : 세계1위] 중국·일본·뉴질랜드·미국·캐나다·싱가포르·홍콩

\*\* [KIEP 전망] 2조 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

[중국과 AEO MRA 체결('13.6월)]



- 전국 세관에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FTA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신규 수출 시장 창출 및 원자재의 원활한 해외조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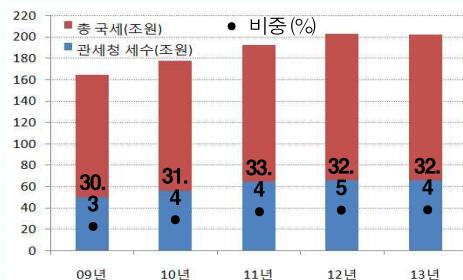
\* 1:1 맞춤형 원산지검증 컨설팅, 간편 원산지 판정 시스템(FTA-PASS) 보급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율 대폭 제고 ⇨ 한·미 76.1%, 한·EU 80.8%, 한·EFTA 80.0%

## ②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적 뒷받침

-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수확보\*에 주력

\* 65.5조원(전체 국세 201.9조원 중 32.4%) 재정조달

[최근 5년간 관세청 세수 비중]



- 관세행정 기능·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하여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양성화 목표액 성공적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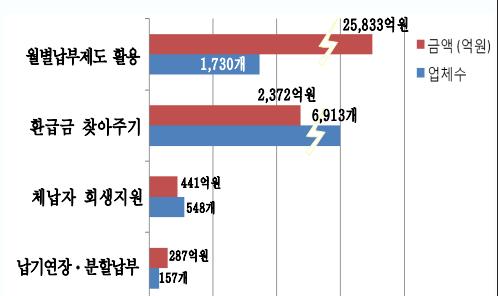
\*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단 운영(총 92팀 457명 : 기존 41팀 223명 + 추가 51팀 234명)

\*\* 1조4백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 목표액(7천6백억원) 대비 36.8% 초과 달성

### ③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 중소기업 대상으로 성실무역업체 (AEO)지정\* 및 면세산업 진입 확대\*\*
  - \* [중소중견 성실무역업체] ('12)14개 ⇨ ('13)35개
  - \*\* [중소중견 면세점] ('12)3개 ⇨ ('13)12개
- 중소기업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납기연장·분납 등 세정지원 강화
-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한편,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FTA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중소기업의 FTA 활용단계에 따라 스스로 FTA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원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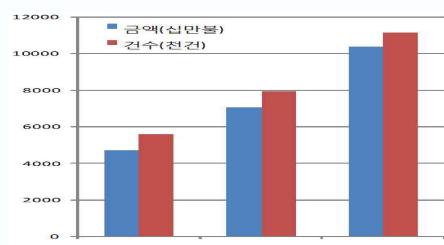
### ④ 수입물품 가격인하 및 소비자 보호

- 병행수입물품 세관인증제를 확대하고 수입가격 공개품목을 생활 밀접품목\* 위주로 추가하는 등 수입물품 가격경쟁 촉진
  - \* 할당관세품목·농수축산물 등 60개 품목 매월 1회, 생필품 13회 공개
- 원산지둔갑 우려물품의 유통이력\*을 추적하고 위조상품의 사이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유통질서 확립
  - \*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12)22개 → ('13)29개

### ⑤ 개인소비물품에 대한 통관체제 혁신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접 구매 금증에 따라 전담인력 확충, 첨단 검사장비, 전용검사장 설치 등을 통해 신속·안전한 통관 적극 지원
- 인천공항에 신용카드 무인세금수납기 설치 및 '내국세 환급 (Tax Refund) 절차' 개선\* 등 내·외국 여행자 편의 증진
  - \* 1만원 미만의 소액환급건에 대해 세관방문 없이 공항에서 즉시 환급 받도록 세관절차 생략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추이]



## 6 국민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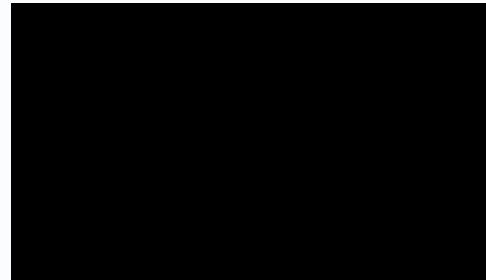
- 전국세관에 「수입식품안전대책단」을 발족하여 방사능 오염 물품 등 외국 불량먹거리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차단\*

\* ['13 불법·불량먹거리 적발실적] 517건 · 3,616억원 (전년 건수대비 13.6% 증가)

- '마약류 우범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X-ray 검색기 등 첨단 장비 확충을 통해 총기·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방지\*

\* 최근 10년 이래 최대 규모의 마약단속 실적 달성 (전년대비 46% 증가한 930억원 적발)

### [마약류 단속 실적]



## 7 불법·부정무역 및 국부유출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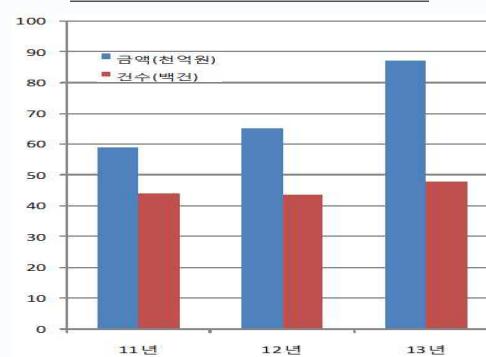
- 금괴 밀수 등 무역거래를 악용한 조직적·지능적 불법행위\* 차단

\* 금괴 359kg(시가185억원) 등 총 1,714억원 적발

-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외환 범죄 적발

\* 159건, 1조2천억원  
(전년대비 건수 96.3%, 금액 36.8% 증가)

### [최근 3년 조사단속 실적]



## 8 국익제고를 위한 세일즈 관세외교 전개

- 관세청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중남미 등 신흥개도국에 수출\*하여 시장 선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05~'13) 에콰도르 등 8개국, 약 1억불 전자통관시스템 수출(1,460명의 일자리 창출)

- 중국·인도네시아 등 해외진출기업의 통관애로를 관세관·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등 통관장벽 완화

\* (예) 한·중 관세청장회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L社의 미환급금(1,800억)이 즉시 환급되도록 조치하는 등 통관애로 208건 해소, 기업비용 2,145억 절감

- WTO 무역협정에 통관단일창구, 통관시간 측정시스템 등 우리 관세제도를 반영함으로써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 선도

## 9 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정부3.0 선도

- 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외환거래·탈세 단속 성과\* 극대화

\* 역외탈세 협의정보·과세 기초정보 등 1,430만건 확대 ⇨ 1,300억원의 세수 추가 확보

[정부 3.0 BP 경진대회 大賞 수상]



- 복지부·방위사업청·조달청 등과 통관·보조금 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

\* [예] 복지용구·치료재료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부당편취 608억원 적발

## 2 평가

- ◆ 새 정부 출범 1년차인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지원·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정과제 및 거시경제정책을 관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 세계은행(World Bank) 통관환경 평가 5년 연속 세계 1위('13.9월)
- 국제공항협회(ACI) 국제공항 세관 만족도 평가 9년 연속 세계 1위('14.1월)
- 정부 3.0 BP 경진대회 大賞('13.12월)
- 국가통계발전 유공 대통령상('13.9월)

- ◆ 박근혜정부 二年次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부 핵심정책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더불어,

-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의 성과 창출에 보다 주력할 필요



### III. 2014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1. 정책추진 여건
2. 정책추진 방향

## ① 대외 경제 전망

- 세계 경제는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美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 \* 세계 GDP성장률 전망(IMF) : ('13) 2.9% ⇒ ('14) 3.6%
- 전세계적인 FTA 확산에 따라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지역간 경제블록화\* 및 비관세 장벽은 강화되는 추세
  - \* 미-EU FTA(TTIP), 미국 주도 TPP, 중국 주도 RCEP, 일-EU EPA 등

## ② 국내 경제 전망

- 우리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부채 · 내수 부진 등의 위험요인으로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 한국 GDP성장률 전망(IMF) : ('13) 2.7% ⇒ ('14) 3.7%
- 세계경제 회복세, 교역량 증가\*로 세수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나 재정의 경기부양 기능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증가 예상
  - \* 한국 수출입 증가율 전망(기획재정부) : (수입) 9.0%, (수출) 6.4%

## ③ 국민건강 ·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상존

- 불량 먹거리 등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아시안 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관심 증가

## ④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개인무역시대의 본격 도래

- 인터넷 · 스마트폰을 활용한 국가간 전자상거래 등의 급증에 따라 자가소비 목적의 개인무역과 관세행정간 밀접성 증대

## 추진 방향

새 정부 二年次를 맞이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견인

- 수출증대가 내수·일자리 창출로 확산되는 등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 불확실한 세입여건에 대응하여 엄정한 세수관리와 철저한 세원발굴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 비정상적인 불법·부정무역을 정상화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켜내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무역질서 확립

## 중점 추진과제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
-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 불법·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 IV.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
2.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3.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4. 불법·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5.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6. 국의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7.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 ◇ 창조경제를 기초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

## [1] 이행 계획

### □ 全방위 수출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FTA가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수출증대로 이어지도록 최초 활용부터 사후검증까지 FTA 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체제 운영
- AEO MRA(상호인정협약)를 주요 교역국 중심으로 확대·체결\*하여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 멕시코·인도·터키 등 교역규모가 크고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 우선 체결 추진
- 농수산식품 단지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보관·수출이 가능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우리 농어업의 수출기반 조성

### □ 新물류 부가가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 보세·물류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 등 국제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도록 지원
  - \*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제품 보세운송절차 마련 등
- 고비용의 외국간 특송물품을 국내 환적을 통해 저비용의 국제 우편운송(EMS)으로 재배송\*함으로써 외국 특송물류 유치
  - \* [현행] 미국(특송) ⇔ 중국 [향후] 미국(특송) ⇔ 한국(EMS 배송) ⇔ 중국
- 화물의 단순 보관에 국한된 보세창고의 기능을 확대하여 분리·병합·재포장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도록 개선

## □ 强小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AEO 공인에 필요한 심사절차 간소화, 자금지원 등을 추진하여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 확대\*
  - \* [중소수출기업 공인획득 지원업체 수] 16개('12) ⇨ 23개('13) ⇨ 65개('14)
- 기업이 작성한 FTA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세관장이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 완화\*
  - \* 원산지확인서 제3자 사전확인제도,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 구축 등
-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 관세납부 복합결제(현금+카드) 도입\* 등으로 기업 자금부담 경감
  - \* 복합결제 기능 제공 ⇨ 카드납부분에 대해 결제시점까지 징수유예 효과 발생

## [2] 기대 효과

- FTA 활용, AEO MRA 확대, 농수산 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한 관세행정상 총력지원으로 수출증대 및 경제 활성화 촉진
- 동북아 거대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新물류 프로세스의 결합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제물류 중심국가로 성장 지원
  - \* 복합물류 보세창고제도 도입 ⇨ 일자리 300명, 부가가치 연간 129억원 창출
  - \* 외국 특송물류의 국내환적 유치 ⇨ 일자리 1,000명, 부가가치 연간 3,600억원 창출
- 특히, 국내 석유제품 탱크터미널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정유사의 수출 증대로 동북아 오일허브의 조기 실현 지원\*
  - \* (석유제품 수출증가 전망) 연간 5,300억원, (탱크터미널 연간 수익증가 전망) 연간 300억원
- 인적 · 물적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확대를 통해 强小기업으로 성장

- ◇ 불합리한 납세관행의 정상화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여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 [1] 이행 계획

### □ 2014년 세수목표 달성

- 증가하는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세수목표(68.1조원<sup>\*</sup>)를 차질없이 징수
  - \* 전체 국세 216.5조원의 31.5% 수준
- 세수관리 점검단을 전국세관 단위까지 확대<sup>\*</sup>하는 등 조직 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
  - \* [기존] 본부세관(6개) 단위  $\Rightarrow$  [확대] 전국세관(47개) 단위

### □ 과세 정상화를 위한 조직역량 결집

-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 집중<sup>\*</sup>
  - \* [관세조사 인력확충 계획] 47명('14)  $\Rightarrow$  56명('15)  $\Rightarrow$  56명('16)  $\Rightarrow$  57명('17)
- FIU 자료·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등 금융정보<sup>\*</sup>와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지능적 조세탈루 차단
  - \* 관세범칙사건·관세탈루 조사·관세체납 징수관련 FIU자료, 분기별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 FTA 특혜를 악용한 원산지 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원산지 검증을 강화<sup>\*</sup>
  - \* 효과적인 FTA 원산지검증을 위한 업체별 검증 도입 및 기획 검증 실시 등

## □ 세입 확보를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

- 국세청(국세)·안행부(지방세)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과세정보 공유를 위해 부처간 과세정보시스템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  
\* (현행) 지방세 환급자료 등 4종 ⇒ (확대)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10종 실시간 연계
-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도입, 수입자에 대한 입증 책임 강화, 국세청과 합동 체납정리\* 등 조세채권 관리 강화  
\* (예) 부산세관·부산국세청간 체납 공동정리 시범사업 추진中
-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대형 로펌 등의 공격적 소송에 대응해 정당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쟁송수행 체계 개편\*  
\* 쟁송조직 확대(송무센터 신설), 본청 소송전담 주요사건 범위 확대(50억⇒10억) 등

## [2] 기대 효과

- 증가하는 복지재정 등 국가재정 수요의 안정적 뒷받침을 통해 국가 주요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
- 엄정한 기업심사를 통한 조세탈루 차단 및 체납관리 등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

### [향후 4년간 추가세수 확보계획]

연 도	'14	'15	'16	'17	합계
금액(조원)	1.34	1.40	1.43	1.48	5.65

※ ('13) 1조 4백억원 추가세수 확보('13 목표 7,600억원 대비 36.8% 초과 달성)

- 세율체계 개편없이 시스템·제도 등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효율적으로 확보

◇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에 대응한 효과적인 통관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무역 2조달러 · 수출 5대 강국” 진입을 조기에 실현

## [1] 이행 계획

### □ 무역하기 좋은 스마트 통관환경 조성

- 기업 · 개인의 무선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태블릿 PC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통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
  - \* ('14) 모바일 통관시스템 구축 ⇒ ('15)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 등
- 세관신고 즉시 통관이 완료되는 전자통관심사 수혜업체와 모든 수출입 업무를 원스톱 처리하는 통관단일창구의 연계기관 확대\*
  - \* (현행) 38개 기관 ⇒ (향후) 점진적으로 연계기관 확대
- 각 부처에서 요청한 통관 규제 사항(5,518개 품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동 규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한 일몰제 도입\*
  - \*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 재정비(수출입요건을 규제하는 14개 기관과 우선 협의)

### □ 신속 · 안전한 수출입통관 관리체계 구축

- 선사 · 항공사가 제출한 화물정보와 수입신고인이 제출한 화물정보를 대사\*하여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는 통합검사체계 구축
  - \* 입항시 제출정보(적하목록 17개 항목)와 수입신고시 제출정보(69개 항목) 통합 분석
- 도난차량 밀수출 등 간소화된 수출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물품 선적시점(출항 前)에서의 수출검사 강화
  - \* 수출품 보세구역장치의무('94) 및 보세운송의무 폐지('96), 수출신고 자동수리(94%)
- ‘과거 적발이력’ 중심의 세관 검사대상 선별체계를 ‘실시간 위험정보’ 기반으로 전환하여 세관검사의 실효성 제고

## □ 새로운 무역형태에 대응한 통관체제 정비

-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개인소비물품 반입 급증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제도를 개편\*하고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
  - \* (일반수출 · 간이수출 단점보완) 신고항목 간소화, 무역통계 관리 및 환급 지원
- 허위 주소지 제출 및 분산반입을 통한 면세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송화물의 실제 배송지정보 제출 의무화
  - \* (최근 5년간 특송물품 부당 감면) 1,446억 상당(연간 251억 상당의 세금탈루)
- 수입우편물 사전정보 교환국가를 미국에서 중국 · 일본까지 확대하고 특송 · 우편물 통합위험관리 체계 마련

## [2] 기대 효과

- 모바일 통관서비스 구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출입이 가능한 선진 통관환경을 조성하여 세관절차상의 불편을 대폭 완화
  - \* 5 Any 통관서비스 (Anytime, Anywhere, Anynetwork, Anydevice, Anyservice)
- 성실무역업체(AEO)에 대해서는 24시간 365일 더욱 간편한 통관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수출입경쟁력 및 성실도 제고\*
  - \* 성실기업 우대, 불성실기업 관리강화 등 「Two-track 통관서비스」로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등 성실도 제고를 위한 유인 제공
- 전자상거래 등 新무역형태에 대응한 수출입 체제의 구축으로 개인무역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및 소비자 효용 증대\*
  - \* 개인무역과 일반무역간 경쟁을 통해 수입물가 하락 및 소비 선택폭 확대
- 효과적 검사체제 구축을 통해 최초 통관단계에서 불법물품 적발로 시중유통 차단 등 단속효과 제고 및 국가비용 절감

◇ 비정상적인 불법 · 부정무역의 엄정한 단속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대외거래 질서” 확립

### [1] 이행 계획

-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통한 국부유출 차단
  - 최근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 외환시장 불안을 틈탄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별 수출입·외환거래 실적을 실시간 모니터링
  - 확대되는 FIU 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재산도피 ·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
    - \* 범죄조사 목적 ⇒ 범죄조사 + 관세탈루 + 체납징수 목적까지 확대
    - \*\* FIU가 제공하는 혐의정보·고액현금거래정보 집중 분석팀 운영
  - 비자금조성 · 공공재원 부정수령 등 부당이득 목적의 국제무역 거래 가격조작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 \* 군납사기 · 의약품 리베이트 · 장애인보장구 · 복지용구 · 치료제 등 취약분야 발굴
-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 · 부정행위 단속 강화
  - 고세율품목, 위조상품에 대한 컨테이너 밀수 등 한탕주의식 조직형 · 기업형 무역범죄 엄단\*
    - \* 고위험품목 조직밀수 전담팀 운영, 밀수조직 프로파일링 및 상시동향 파악 등
  - 계절에 따른 수요증가, 국내외 가격변화 등에 대한 시중동향 분석을 통해 밀수위험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실시
  - 개별사건 간의 연관성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능적인 대규모 조직밀수 사범의 배후까지 추적 · 단속
    - \* 사건별 밀수입자 · 해외 공급처 · 밀수경로 등의 유사점 추출 분석

##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경찰청·식약처·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 네트워크 강화 및 공조수사 활성화\*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
  - \* (경찰청) 중고차, (식약처) 불량먹거리, (해수부) 해상면세유 등
-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의 수사당국과 실시간 밀수정보 교환 및 공조수사로 해외공급망까지 발본색원

## (2) 기대 효과

- 국외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여 외환 수사 전문기관으로서 역량 축적 및 외환거래질서의 건전성 확보
  - \* ('13) 재산도피·자금세탁 검거실적 : 90건, 5,066억 (전년대비 금액기준 135% 増)
- 특히, 무역거래를 악용한 복지재원 부당수령 등 공공재원 편취 행위를 근절하여 국가재정의 누수(漏水) 방지
- 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척결을 통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지원
  - \* 한국의 법질서 수준(6점 만점에 4.4점)이 OECD 평균(5.5점)에 도달시 연평균 1%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 <한국개발연구원>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공조수사 확대로 불법·부정 무역의 시작점과 종점에 대한 근원적 차단효과 제고

- ◇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원천 차단하여 국민생활 보호에 기여

## [1] 이행 계획

### □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효과적 차단

- 방사능 오염 물품·외국산 불량먹거리 등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율 상향 조정\* 등 통관관리 강화
  - \* [검사율] 일반 수입물품 2~3%, 중점감시 수입식품 11~14%
- 용도전환(비식용⇒식용)·국산둔갑 우려식품 등 사회적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긴급지정제 도입 등 유통이력 관리제도 개선\*
  - \* 유통이력물품 표시제(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식품위생법의 한글표시제와 연계) 등 도입
- 마약류의 주요 공급ル트별로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아·태 지역 국가들과 국제합동 단속 등을 추진
  - \* ['13 루트별 적발비율(건수기준)] 국제우편 55%, 특송 24%, 여행자 19%, 기타 2%

### □ 민생안정을 위한 수입물품의 효과적 관리

- 통상분쟁과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적고 생활필수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공개 확대\*
  - \* ① 공산품을 가격공개 대상에 포함 ② 4분위 평균가격 공개 ③ 60 ⇨ 100개로 품목 확대(~'16)
- 물가안정과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업체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병행수입 활성화 지속 추진\*
  - \* 통관표지(QR코드) 부착대상 상표 확대, 주요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

## □ 사회안전을 위한 공항만 감시체제 확립

-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테러방지 등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 \* 인력·장비 재배치 및 대회기간 24시간 비상근무, 본청 및 세관 전담조직 운영 등
- 3D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류 등 신종 무기류의 반입차단을 위해 여행자·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경로별 정보분석 및 단속 강화
- 관세청 통합항만감시시스템(IN-POSS)과 해경청 해양경비 안전망\*의 연계 등 항만 감시·단속 인프라의 지속적 효율화
  - \* 전국 76,000척 어선의 위치·항적 등을 전자해도 상에 표시

## [2] 기대 효과

- 불법 먹거리 등 국민건강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기여
  - 특히, 관세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이미지 제고
    - \* '13 마약류 단속실적 : 46,429g (시가 930억원), 전년대비 금액기준 46% 増

☞ '13 마약류 단속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한국재정학회, 국민보험건강공단)

$$1,859억원 = \frac{46,429\text{그램}}{2\text{그램}(1\text{인마약중독량})} \times 801\text{만원(중독자치료비용)}$$
- 수입 생필품 등의 가격공개,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
  - \*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Gap 공개로 유통과정에서 불합리한 폭리행위 억제 효과
- 공항만 감시체제 효율화를 통한 총기류 등 위해물품 차단으로 국제경기의 성공 개최 등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 ◇ 성과중심의 관세외교활동 전개로 우리기업에게 우호적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개도국 지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관세행정 리더로 도약

## [1] 이행 계획

### □ 우리 수출기업의 新시장 진출 지원

- BRICs · ASEAN 등 통관분쟁 빈도가 높은 국가와 관세청장 회의를 활성화\*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
  - \* ('14 개최 예정) 홍콩, 니카라과, 라오스, 스페인, 멕시코, 베트남 등 15개국
- 첨단 IT제품 등 수출 주력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WTO 정보기술협정(ITA)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
  - \* 현재 250개 품목 개정협상 中(관세청 제안 품목 : 모니터류 · 반도체장비 · LED 등 13개)
- 인터넷 해외 통관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에 관세관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통관애로 해소
  - \* (現) 6개국 · 9명 ⇒ 통관애로 다발국 인니 · 브라질 · 인도 등 관세관 파견 추진 中

### □ 개도국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 국내외 개발원조 자금(KOICA 자금, 세계은행 기금 등)을 활용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 보급 확대\*
  - \* ('05~'13) 8개국 · 1억 148만불 ⇒ ('14~'16) 7개국 · 1억 4,700만불
- 세관협력기금\*(CCF-Korea)을 활용하여 남미, 아프리카 등 전략적 지원국가에 대한 한국형 AEO 제도 확산
  - \* ('11~'13) 10.7억원 지원 ⇒ ('14~) 15.7억원으로 증액
- 대륙별 거점국가 중심으로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제도를 개도국에 지속 전파

## □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 선도

- APEC 물류비용 절감계획, ASEM 무역원활화 실천계획 등 세관관련 국제회의를 통해 통관절차 표준화에 적극 기여\*
  - \* (ASEM) 무역원활화 실현을 위한 통합국경관리(관세청) 분야 간사국 수행 등
- WCO 및 FTA 체결국과의 원산지 협력강화,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 정례화 등을 통해 원산지제도 통일화 논의를 선도\*
  - \* WCO 원산지 증명절차 마련을 위한 자문단 그룹(6개국) 참여
- 위험관리 · 원산지 등 주요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훈련을 강화하여 국제 관세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
  - \* (現) WCO 인증교관 7명 ⇨ ('14 계획) 통관단일창구 등 WCO 인증 전문가 2명 배출

## [2] 기대 효과

- 관세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를 직접 · 즉시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 촉진
- WCO HS 위원회, ITA(정보기술협정)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 주력상품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을 사전 차단

###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기업 비용 절감]

연도	'11	'12	'13*	'14~
금액 (억원)	892	936	2,145	'14 이후 매년 최소 1,000억원 이상

\* ('13) 중국 관세청의 1,800억원 세금 환급조치로 인한 실적 포함

- 개도국 지원 및 협력을 통한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출 협력 교류보 마련 및 시장선점 효과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 ('05~'13) UNI-PASS수출을 통해 1,46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거양

◇ 중장기적인 視界로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는 등 미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착실하게 조성

## [1] 이행 계획

### □ 정부 3.0 기반 對고객 서비스 혁신

- 선제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개별 정보수요를 파악해 영업비밀·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관세정보를 원칙적으로 개방 추진
  - \* 공공데이터 포탈 등을 통해 관세행정 DB 92개 등 '17 까지 147개 개방 추진
- 선도적으로 국세청·금융위·복지부 등과 과세·수사정보 공유 확대\* 및 공조수사·합동단속을 통한 부처간 협력 강화
  - \* '관세행정 정보 개방·공유·소통·협력 종합대책' 마련·시행
- 국민 중심·국민 우선의 관세행정을 위해 對국민 홍보 및 소통채널 구축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 □ 청렴문화 확립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 청렴교육\*·청렴서약제 시행을 통해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고 세관별로 청렴도를 평가·개선하는 등 자율정화체계 마련
  -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on-off Line을 통한 전직원 반부패·공직윤리 교육 상시화 등
- 취약분야·시기·인물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금품수수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無관용 원칙 견지
- 복지부동 등 비정상적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일상화하고 성실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확산

-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의 효율적 토대 마련
  - 국가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차질없이 구축<sup>\*</sup>하여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 \* 분석·설계('13) ⇒ 시스템 구축('14) ⇒ 테스트·전환('15) ⇒ 개통('16)
  - 관세행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에 대해 규제혁신을 추진<sup>\*</sup>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
    - \*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기업 관계자·규제 전문가 등)' 구성·운영('14.3월)
  - 미래 관세행정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조직성장 유도

## [2] 기대 효과

- 정부3.0 혁신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부처간 칸막이 제거<sup>\*</sup>로對정부 국민만족도 증진 및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 \* 관세청의 선도적 정부3.0 실현으로 타부처 파급효과 유도
- 비리 척결(Zero-corruption)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고 정책의 수용도 제고<sup>\*</sup>
  - \* 6대 중대비리(금품향응수수·횡령·음주운전·성범죄·정보유출·밀수관여) 발생 제로화 추진
- IT 인프라 확충 및 업무 프로세스의 전면 개편 등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으로 기업 물류비용 절감<sup>\*</sup>
  - \* 4세대 국종망 구축시 기업물류비용 절감액 : ('16) 800억 ⇒ ('17 이후) 820억
- 국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



## V. 분기별 추진 계획

## 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

	실천 과제	실천일정
1/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춤형 컨설팅지원 세부 시행계획 수립</li> <li>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전국 확대시행</li> <li>한-홍콩 AEO MRA 체결</li> <li>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MOU 체결</li> <li>동북아오일허브 관세행정 지원 T/F 구성 · 운영</li> <li>한-멕시코 AEO MRA 서명</li> </ul>	2월 2월 2월 2월 3월 3월
2/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진 오일허브지역(싱가포르, 일본) 현황조사</li> </ul>	5월
3/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납부 복합결제(현금+카드) 제도 도입</li> <li>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li> <li>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 신설</li> </ul>	7월 8월 9월
4/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터키 AEO MRA 체결</li> </ul>	12월

## 2.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국적기업 FTA 특혜무역 모니터링 및 검증</li> <li>세수점검 : 세수동향(매일), 세수분석(매월), 전국 세관장 점검회의(분기)</li> </ul>	연중 연중
1/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계획 수립</li> <li>‘14 원산지 기획검증 기본계획 수립</li> <li>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보분석</li> <li>본청 소송수행팀을 송무센터로 확대 · 개편</li> </ul>	1월 2월 2월 2월
2/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반기 정기법인심사대상 선정</li> <li>납세자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관세법(영) 개정안 기재부 제출</li> </ul>	5월 5월
3/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급정보 실시간 교환</li> </ul>	9월

### 3.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 국제우편물 사전통관정보교환 국가 확대	연중
1/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DA 우범 기준 개발</li> <li>수출화물 적재지 검사체계 개편</li> <li>배송결과정보 확인시스템 구축</li> <li>통합 검사방안 기본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월</li> <li>3월</li> <li>3월</li> <li>3월</li> </ul>
2/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입 규제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li> <li>국제우편물 C/S 운영방안 마련</li> <li>모바일 통관체제 분석 및 설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li> <li>6월</li> <li>6월</li> </ul>
3/4 분기	▪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전면 재검토 및 세관장확인 고시 개정	7월

### 4. 불법·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 「부정식품사범 단속 특사경 협의체」 정보교류	연중
1/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농진청·검찰과 위해식품 공조수사</li> <li>일본·홍콩세관과 금괴 밀수조직 공조수사</li> <li>설·대보름 밀수 및 원산지위반 특별 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월</li> <li>2월</li> <li>2~3월</li> </ul>
2/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세회피처로의 외환반출 정보분석</li> <li>고위험물품 조직밀수 전담팀 지정 운영</li> <li>FIU 정보의 전략분석 계획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li> <li>5월</li> <li>6월</li> </ul>
3/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석 명절 밀수 및 원산지위반 특별단속</li> <li>관리대상화물 검사비율 상향 및 일제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월</li> <li>9월</li> </ul>

## 5.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 3D프린터 총기 등을 활용한 대테러 모의훈련	연중
1/4 분기	▪ 대테러 관세국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 X-Ray 판독요원 교육계획 수립 ▪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 완화	1월 3월 3월
2/4 분기	▪ 수입가격 추가 공개품목 정기공개 ▪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안전 및 통관지원 대책 수립 ▪ 병행수입 가이드라인 제작 · 보급	4월 6월 6월
3/4 분기	▪ 전자상거래 주요 수입품목 현황 등 분석 · 공표	8월
4/4 분기	▪ 해양경비안전망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12월

## 6.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 관세관 증원 관계부처(외교부·안행부 등) 협의 ▪ 관세청장회의 개최	연중 연중
2/4 분기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 추진 ▪ 동남아프리카 지역 관세청장회의 개최 지원 ▪ 관세관 초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최	4~12월 5월 5월 6월
3/4 분기	▪ 세계은행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협력 MOU 체결	9월
4/4 분기	▪ 모바일 해외통관지원센터 시범 운영 ▪ 라오스, 인도 등과 원산지 협력 MOU 체결	11월 11월

## 7.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제4세대 국종망시스템 개발</li><li>전 직원 반부패 · 공직윤리 교육 실시</li></ul>	연중 연중
1/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구성</li><li>관세청 미래발전 전략 마련</li><li>청렴실천선언식 개최</li></ul>	2월 2월 3월
2/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우리청 등록규제별 비용분석 및 타당성 검토</li><li>4세대 국종망 2단계 구축전략 수립</li><li>선거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li></ul>	4월 5월 5~6월
3/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세관별 · 업무별 자체 청렴도 평가</li><li>고시 · 훈령 정비</li></ul>	7월 10월
4/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통관단일창구 구축기관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li></ul>	11월